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79회 임시회>

2009. 6. 2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동 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 3.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가. 정원의 총수 규정(안 제2조): 658명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규정(안 제3조)

다.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안 제6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9조 내지 제30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 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의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문서·대장 등의 열람 - 1건(10매기준)1회 200원
- 문서·대장 등의 사본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도면·카드 등의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도면·카드 등의 사본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 본인 부담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매년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증대에 다소의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과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 3. 개정 이유

- 대구광역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유도를 통하여 실업률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향토기업(대구3030)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고용창출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탈 대구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대구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하고, 단 임대용부동산은 감면 제외 및 감면분 추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5.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역 토착기업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이전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2009년 3월 13일자 행정안전부에 대한 대구광역시 본청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및 8개 구·군의 구·군세 감면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5월 6일자 행정안전부의 허가에 따라 개정하는 적절한 안으로 여겨집니다.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第3條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개정 1998.12.31>)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삭제 <1988.4.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條例의 施行에 따르는 節次 其他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 3. 개정 이유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지휘·통제에 속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이 공동모금회로 경유되어야 하는 등 기부절차의 다단계로 기부금품모집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므로 조례 중 일부 법적 저촉 조항을 개정하여 달성복지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은

- 달성복지재단 조례 중 이사장 임면, 수익사업, 사업계획, 결산 등 자치단체장 승인 조항 개정
-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 감독 업무와 소속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을 삭제

### 5.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복지재단」이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지휘·통제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재단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을 주무관청 허가사항으로 변경하고, 이사장 임면을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달성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업 수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공익재단으로서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
- 다만,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재단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 계 법 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